

H.RES. 121 결의안

일본정부가 1930년대부터 2차 세계대전에 이르는 아태지역 식민지 점령 기간 동안 일본 황군이 ‘위안부’로 알려져 있는, 젊은 여성들을 강제적으로 성 노예화한 것에 대해 명백한 방식으로 공식 인정하고 사죄해야 하며 역사적 책임을 수용해야 할 것을 권고하는 미 하원의 결의

일본정부는 1930년대부터 2차 세계대전에 이르는 아태지역 식민통치 기간 동안 ‘위안부’로 알려져 있는, 젊은 여성들을 오로지 일본 황군의 성 노예로 삼기 위해 공식적으로 징집하였으며,

‘위안부’ 제도는 일본정부에 의해 강요된 군 매춘으로써 잔혹성이나 규모면에서 전례가 없었던 일이며, 집단강간, 강제낙태, 모욕, 신체장애, 사망, 자살에 이르게 하는 성폭력이 자행되었는바 20세기 최대 인신매매 사건 중 하나이며,

일본 내 일부 신규 교과서는 ‘위안부’ 여성의 비극과 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의 전쟁범죄를 축소하려 하고 있고,

일본의 관리들은 최근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진정한 사죄와 참회를 담은 1993년 Kono 관방장관의 담화를 희석시키거나 폐기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고,

일본정부는 1921년 ‘여성 · 아동 인신매매 억제에 관한 국제협정’에 서명하였고, 2000년 전쟁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정하는 ‘여성 · 평화 · 안보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를 지지하였으며,

하원은 일본이 인간보호, 인권, 민주적 가치, 법의 지배를 증진시키고 ‘유엔안보리 결의안 1325’를 지지하는 것을 평가하고,

하원은 일본관리 및 일본시민들이 성심과 열정을 다한 노력의 결과 1995년 민간 아시아 여성기금이 설립된 것을 평가하고 ,

아시아 여성기금은 ‘위안부’ 여성에 대해 사죄하기 위해 570만불의 민간기금을 모금하였으며,

아시아 여성기금은 일본정부가 주도하고 대부분 정부 지원 기금으로 충당된 사적인 기금으로써, ‘위안부’ 여성들에 대한 처우와 고통에 대한 사죄의 표시로 각종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 설립되었는데 동 기금의 시한은 2007년 3월 31일부로 종료되며 동

날짜를 기준으로 해체되는바,

미하원은 일본정부가 아래 조치를 취할 것을 결의함.

(1) 1930년대부터 2차대전에 이르는 아태지역 식민지 점령 기간 동안 일본 황군이 '위안부 여성'으로 알려진 젊은 여성들을 성노예화한 것에 대해 명백하고도 모호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식 인정하고, 사죄하며, 역사적 책임을 수용해야 함.

(2) 상기 공식사과는 일본총리가 총리자격으로 발표하는 공개발표문 형식이어야 함.

(3) 일본 황군을 위한 '위안부' 여성의 성노예화와 인신매매가 발생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명백하고도 공개적으로 부인해야 함.

(4) '위안부' 여성에 관한 국제사회의 권고를 따른 동시에 잔혹한 동 범죄에 대해 현재 · 미래세대를 교육시켜야 함.